

고교생 중도 탈락자 급증

지난해 광주 1293명·전남 1451명으로 2배 늘어

탈락생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시급

광주·전남에서 학교 생활 부적응과 생활고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 중도 탈락' 고교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탈락생에 대한 사회 적응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매년 중도 탈락 고교생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에는 양 지역 모두 탈락자가 1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같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은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거나 사회 낙오자가 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탈락자 성향 분석을 통해 직업교육 같은 사회 진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검정고시 등 학업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탈락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인 데다 학생 신분도 아닌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는 물론 유관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관리·교육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06년 633명(일반계 273명, 전문계 360명)에서 2007년 742명(" 307명, " 435명), 2008년 888명(" 363명, " 525명)으로 매년 20% 가량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전년보다 405명이나 증가한 1293명



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 뒀다.

2009년 광주지역 고교생의 학업 중단 사유는 생활고와 가정불화 등에 따른 가정 사정이 5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387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지역 고교생도 2006년에 821명, 2007년 798명, 2008년에는 89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2009년에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451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이는 광주·전남 각각 전체 고교생 대

비 2.0% 비율로, 전국 평균인 1.8%를 웃도는 수치다. 또 학업을 중단하는 중학생도 광주·전남에서 매년 각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여 탈락학생에 대한 관리나 지도는 제도적으로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업 중단 원인은 상당수가 가정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학생관리 시스템 마련 등 각종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비브리오 패혈증 해남서 40대 사망

“어패류 조심”

전남지역에서 유행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의심환자가 숨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남도는 박모(47·해남군 마산면)씨가 지난 2일 오후와 왼쪽다리 통증, 피부병변(수포) 등의 비브리오 패혈증 의심증세를 보여 목포지역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하루 만에 숨졌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평소 간경화와 간염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군 배양검사를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결과는 4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일 현재 전국에서 5명의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했으며, 경남 고성군

에서 패혈증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던 박모(48)씨도 지난 1일 숨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고 특히 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어패류를 날로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비브리오 패혈증=여름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만성 질환자 등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군에 오염된 바닷물, 갯벌 등과 접촉할 때 피부의 상처부위 등을 통해 감염된다. 잠복기는 1~2일이며 급작스런 발열과 오한, 전신쇠약감 등으로 시작해 때로는 구토와 설사가 동반되며 치사율이 40~50%에 이른다.



목포 영아 B형 간염 예방접종 직후 사망

유족·시민단체 진상규명 촉구

지난달 목포에서 8개월된 영아가 B형 간염 예방접종 직후 사망한 사건을 놓고 시민단체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민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영아의 사망과 관련, 목포시와 보건료 당국은 유족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목포시민연대는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에 보호자가 한 달 전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과 병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문진을 하

지 않은 점, 예방접종 직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은 목포 보건소 측의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생후 8개월된 송모양이 목포보건소에서 B형 간염 3차 접종을 받은 지 7시간 만에 숨지면서 유가족들이 의료사고 등을 주장하며 보건소 앞에서 1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목포경찰도 지난달 28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송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강진 청자축제 오세요”

제38회 강진청자축제(7~15일)를 앞두고 3일 오후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강진군 대구면 청자박물관 입구에 마련된 대형 청자조형물을 배경으로 펼쳐진 샬비어 꽃밭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불륜 사모님 현장 잡아라”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2명 범퍼 교체하다 발견 ‘덜미’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 소규모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1)씨, 김씨는 지난 4월 초순께 남구 봉선동 한 술집에서 “내가 평소 친구처럼 지내는 A(39)씨와 바람이 난 같다”는 원청업체 사장의 고민을 들었다.

김씨는 며칠 뒤 원청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모님의 불륜 여부를 알아보겠으니 A씨의 집주소와 승용차 번호만 알려달라”고 말했다. 불륜 현장을 직접 찾아내서 보고한다면 원청업체 사장과 더욱 가까워져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A씨의 집주소와 차량 번호를 알게 된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선배 이모(46)씨를 찾아가

“원청업체 사장님의 부인이 바람이 난 것 같다. 상대 남성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해달라”고 부탁했다.

후배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씨는 지난 4월 중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승용차 뒤범퍼 안쪽에 미리 준비해 온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했다.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한 김씨와 이씨는 이후 인터넷을 통해 50여차례에 걸쳐 A씨의 위치를 추적했다.

그러나 김씨와 이씨의 범행은 지난 7월 말에 A씨가 낚은 승용차 범퍼를 교체하기 위해 정비소에 갔다가 위치추적기를 발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바람에 탄로났다. 광주남부경찰은 3일 김씨와 이씨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여수시장선거운동원 2명 금품제공 혐의 구속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홍석 여수시장 지지자들이 이들은 지난 5월 선거운동원 명목으로 10여명에게 모두 1천800만원가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과 김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나, 김 시장 측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남친 선물 부담에 ‘강도’ 자작극

○20대 여성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남친친구에게 약속한 선물값이 부담스러워 강도 자작극을 벌였다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3일 “지난달 23일 집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22만9000원 상당을 빼앗아갔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왕모(여·28·미용관리사)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제주도 여행 경비 대신 남친친구에게 선물하기로 한 고가의 거품 선글라스를 사지 않기 위해 지인들에게 강도를 당한 것 처럼 속였는데, 이 말을 들은 오빠(31)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자작극이 ‘들똥’.

○왕씨는 경찰에서 “제주도 휴가 계획에 맞춰 남친친구에게 선물하기로 한 거품 선글라스값 80만원이 너무 부담스러워 허위 신고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음란사진 대신 ‘?’ ‘!’

전단 배포 전 레슬링 국가대표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3일 ‘신종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전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이모(20)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 오후까지 일당 2만원을 받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 물음표 또는 느낌표 그림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가 실려 있는 명함형 음란 전단지 10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뿌린 전단지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이 실린 불법 음란 전단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적발되더라도 ‘청소년 유해 매체 광고물’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금지광고물’ 적용을 받기 위해 최근 제작된 것

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유해 매체 광고물을 배포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금지광고물의 경우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로 비교적 가벼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 경우 성매매 업소가 아닌 ‘다방’이라고 속이기로 업주와 입을 맞췄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차례 다른 전화를 이용해 음란 전단지에 게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알선업체임을 확인하고 이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리베이트 4명 징역형 선고

국책사업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건설사와 전기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를 돕고 약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모(38)씨와 지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지씨에 대해

각각 2억4500만원, 5500만원을 추정하는 한편, 이들에게 공사수수 사례금(46)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관행 중 하나로, 공무원가를 왜곡하고 부실시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께 신안군 지도읍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중 일부인 송전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뒤 이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씨 등에게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